

“문화·의료·교육도 균형발전”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지역미디어 진흥정책 발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거버넌스 개편안 등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21일 전북을 찾아 ‘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전북 지역 정책 설명회에서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김윤래 전북지역위원

장, 김진동 전북지역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5대 핵심정책은 첫째, 전 국토의 5급 3목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둘째,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셋째,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넷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다섯째,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이날 균형발전위는 전북지역 정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재상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공황 환란,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대전환 ▲자문용 중심의 글로벌 금융 스마트 메가시티 ▲디지털 문화·관광 실험형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FAO 세계농업대학설립(국제기구 유치) 조성 등 발전정책도 내놴다.

한편 균형위가 제안한 정책 중 일부는 이미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발표됐고, 나머지 정책들은 향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연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 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

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 판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민전 이사진출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대학협력 지원센터 필요”

김윤덕 의원 “농생명캠퍼스 조성 농업교육 대전환 이뤄야”



이재명 선대 위 조직혁신 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 의원은 21일 행정과 대학 간 협력 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전북 지역대학 협력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농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농생명캠퍼스’ 조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교육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역의 경쟁력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을 연계시키는 협력 관계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전북 지역 대학 협력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각 대학의 장점을 하나로 묶고, 우수 중소기업

업 등과 연계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지방 대학이 신입생 감소로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행정과 대학 간의 협력사업 기획,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전담할 ‘전북 지역대학 협력 지원 센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북의 청년 교육 복지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대학 유휴 공간을 활용해 디지털 농업과 생명공학 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 농생명캠퍼스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내 문화,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영대학 과정 운영 및 시설 지원, 도내 유학생과 대학생, 기업 연계를 통한 상사 설립 및 지원,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청년 신용회복 지원으로 청년 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국민특보단 전북1지부 “우리의 미래를 위해” | 이재명 후보 적극 지지 나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플랫폼 국민특보단 전북1지부(이하 특보단)가 릴레이 지지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적극지지 하고 나섰다.

특보단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릴레이 지지선언을 통해 통합과 화합을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보단은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험난한 삶은 곧 국민의 삶이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그 누구보다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행정경험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보단은 전북방문 시, 계획이었던 지역을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언급하며, “나후전북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플랫폼 국민특보단 전북1지부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릴레이 지지선언을 통해 통합과 화합을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특보단 전북1지부 상임단장인 강우규 전북도의원은 “출발 이후 국민특보 영입캠페인을 통해 3,000명이 넘는 국민특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하며, 국민특보단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국민특보단은 전국 22개 지역 및 직능지부로 구성된 조직으로 전북 출신의 진선미 국회의원이 본부 상임 단장을 맡고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매일 한 개 지방씩 릴레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도와 전북발전 위해 최선”

양경숙 의원, 전주 유세 친조 이어 전북 공약 설명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지역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양경숙 국회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라북도 7대 공약 설명 기자회견에 21일 참석했다.

양경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 고향 전북의 상황은 제가 어릴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도와 전북도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전북을 더 이상 차별



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시작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 농생명 수도,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전북도 대전환 완성을 위해 발표한 전북발전 7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주말 전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전북 경제 부흥 시대를 열 것”이라며 “전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로서 여러분의 자긍심을 더 높여줄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부흥하는 전북경제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창조연설자로 나선 양경숙 의원은 “외세와 탐관오리에 맞서 싸운 위대한 동학혁명의 후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적 계승자 직선제를 쟁취한 6월항쟁의 주역, 국정농단사태를 몰아낸 촛불혁명의 주인공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 있느냐”며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코로나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 경제적 고통의 위기를 극복할 후보는 위기를 극복해 본 유능한 경제전문가, 준비된 후보 이재명”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교육감선거 불법 현수막 게시 등 혐의자 2명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전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경 특정 인후보에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다수 거리에 게시하고, 특정 인후보에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9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를 과열시키고 혼탁하게 만들어 결국 유권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 열쇠 수소법 개정안 처리”

김희수 도의원, “그린수소생산 내용 담은 법안 김감무소식”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 공급 청정수소발전의 무효제도(CHPS)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의원은 “수소법 개정안이 터덕이는 동안 수소 발전사업에서 우위에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의 성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해당 개정안 통과를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 기반이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가족돌봄청년 지원책 마련을”

이명연 도의원, 5분발언서



전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인 청년기에 가족의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가족 중 중환자가 발생하게 됐을 때 간병문제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정이 넉넉한 가정에게도 힘들고 가족한 일이며, 가족 불화 및 해체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회에 나올 준비 시기인 청년기에 가족 부양을 떠맡게 될 경우 돌봄과 당장의 생계에 발 묶여 진로 및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반공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가족 부양을 떠안은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4일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첫 걸음을 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 차원의 가족돌봄청년 에 대한 관심은 낮고,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명연 위원장은 전북도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정책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을 위해 청년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병원·시·군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정책지원자에게 즉시 지원 가능한 돌봄 및 생계, 의료, 학습지원 등을 연계하며, ▲향후 지원대상자들의 욕구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10대, 20대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 아픈 가족을 부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접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물류지원센터 활용 특송장 설치해야”

문승우 도의원



군산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해 해상 특송화물통관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최근 부지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군산 특송화물통관장과 관련해 “2022년 6월말 위탁이 종료되는 군산물류지원센터 활용을 특송장 설치기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전북정지권과 협력해 더욱 노력하고, 이슈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따르면 현재 군산항의 경우 군산식도 간 국제카페리션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미 연간 약 100만 건의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 군산항으로 들어온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시 인천항

으로 보세운송된 이후 통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승우 의원은 “군산항에 특송장이 설치된다면, 국내 물류비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화물의 배송 기간을 8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나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향후 군산항을 거점으로 새로운 물류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송장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오식동에 위치해 군산 국제여객터미널과 지근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A 합동조업이 수탁 운영 중이나 올해 6월 수탁 기간 종료로 앞두고 있다. /유호상 기자